

‘국가 이후’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상국 지음, 『연결된 난민, 국가 이후를 살다: 카렌족 난민의 초국주의 실천』
(연세대학교출판문화원, 2025)을 읽고

김희숙 전북대학교 동남아연구소 전임연구원

『연결된 난민, 국가 이후를 살다: 카렌족 난민의 초국주의 실천』의 저자 이상국 교수는 마라토너다. 그를 아는 사람들 사이에선 제법 알려진 듯했지만, 필자는 2023년에 그와 함께 아세안 주요국의 난민 지원 정책에 관한 공동연구(전제성 외 2023 참고)를 수행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다. 이 책을 읽어가는데 필자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이 바로 그것, 그가 마라토너라는 사실이었다. 뜬금없는 연상 같지만, 책을 읽어 본 사람이라면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공감할 것도 같다. 1992년 12월, 그가 석사학위논문 작성을 위한 현지 연구차 처음 미얀마-태국 접경 지역의 난민촌에 발을 디딘 이래 현재까지 이어져 온 연구의 여정, 곧 마라톤에 비유할 만한 장기간에 걸친 이동과 축적의 과정이 이 책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마라톤에 대한 연상은, 아마도 저자가 여러 곳에서 ‘길’을 언급해서였기도 할 것이다. 책에는 ‘카렌족의 길’, ‘모사린의 길’, ‘라에노의 길’, ‘비슷한 길’, ‘비슷하되 같지 않은 길’, ‘초국적 길’, ‘울퉁불퉁한 길’ 등, 카렌족이 미얀마를 떠난 이래 거처온 다양한 삶의 여정과 역경, 목표를 향해 가는 고투의 과정이 길에 비유되어 등장한다. 저자는 그러한 길들이 운동주의 시 ‘새로운 길’에 나오는 ‘내를 건너 숲으로 고개를 건너서 마을로’라는 시구처럼 “여정마다 낮은 정치 지형과 맞서 헤쳐 나가는 새롭고도, 어렵고도, 주체적인 길”(112)이라고 말한다. 마라톤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필자로서는 그 길고 고단한 길을 달리는 사람들이 느끼는

바를 감히 이해할 수 없지만, 이 구절을 읽으면서 비로소 조금은 알게 된 듯도 했다. 마라톤이라는 게 그와 같이 달리는 내내 새로운 지형과 경관을 접하게 되고, 힘에 부쳐도 완주하기까지 스스로를 부단히 일으켜 세우며 주체적으로 길을 가는 행위가 아닌가. 그런 생각에 이르자 재정착 카렌족이 거쳐 온 삶의 궤적에 대한 이해에 마라톤을 하는 동안 저자가 길 위에서 느끼는 바가 온전히 겹쳐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는 저자 자신이 밝혔듯이 이 책이 “연구 대상자와 연구자가 함께 시공간을 옮겨가며 써 내려간 서사극”(257)이기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난민에 관한 연구는 많지만, 이처럼 20여 년에 걸쳐 개별 난민들과 인연을 이어가며 장기간의 생애 궤적을 담아낸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도 드물다. 학술적으로도 값진 성취이려니와, 그 길고 오랜 여정을 함께 달려온 저자와 카렌족 난민의 깊은 신뢰와 우정이 이를 가능하게 한 기반이었다는 점에서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의 관계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책이다.

저자는 이 책을 “흩어진 난민을 찾아 나선 여행기”라고 소개하였지만, 그 여행은 난민촌 연구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온 난민을 만나는 것 외에 또 하나, 아마도 카렌족 난민을 연구하기 시작한 처음부터 간직해 온 오래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었던 듯도 하다. 바로 난민을 발생시키고, 또한 난민을 ‘문제’로 만들어 버리는 근원적인 구속, 즉 ‘국가’를 벗어나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다른 형태의 사회는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저자는 그 답을 ‘국가 이후’를 살아가는 방법에서 찾은 듯하다.

I. ‘국가 이후’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네트워크 공동체

카렌족은 미얀마의 135개 소수종족 가운데 하나로, 이 나라에서 버마족 국가에 맞서 자치를 추구해 온 소수종족 집단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중앙정부에 대항하여 무장투쟁을 전개해 온 종족이다. 미얀마가 독립을 맞은 직후부터 시작된 카렌족의 무장투쟁은 한때 수도인 양곤을 위협할 정도여서, 같은 해 5월 20일 카렌족은 점령한 영토를 독립 카렌국 ‘꼬톨레(Kawthoolei)’로 선포하기도 했다. 하지만 연방의 통일과 통합을 최상의 대의로

삼는 군대가 장악한 버마족 국가의 대응은 단호했고, 그 결과 카렌족의 영토는 태국에 접한 미얀마 남동부 일대로 축소되었다. 정부군이 어느 정도 밀고 들어 오느냐에 따라 꼬똘레의 영토는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는 등 경계가 명확하지 않았고, 또한 카렌족이 누리고자 한 주권 역시 언제든 침범될 수 있는 불확실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카렌족은 이 ‘해방구’를 기반으로 자체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교육과 보건의료 등 사회서비스를 동족에게 제공하며 국가 건설의 희망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1988년의 민주화운동을 진압한 버마족 군대가 이후 카렌족 영토로 피신한 저항 세력과 이들을 지원한 카렌족 군대에 대한 공격의 강도를 높여 더욱 깊숙이 침입해 들어옴에 따라 카렌족의 준국가 체제는 결국 1990년대 중반에 막을 내리고 말았다. 공식적으로는 미얀마의 소수종족 중 하나로 시민권을 인정받는 집단이지만, 그 국가 체제 안에 포섭되기를 거부하며 독립을 꿈꾸었던 다수의 카렌족은 난민이 되어 국경을 넘었다. 미얀마에 접한 태국 국경지대를 따라 난민촌이 우후죽순 생겨난 배경이다.

이 책은 그 후, 이들 카렌족 난민이 어떻게 미얀마 영토 밖에서 “국가가 없는 민족”(16)으로 살면서도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몸으로서 민족”(17)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이다. 제목에서는 이를 “국가 이후를 살다”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저자가 직접 설명하진 않았지만 여기 포함된 ‘국가 이후’라는 말은 중의적이다. 그 첫 번째 의미는 1990년대 중반의 난민사태 이후 이들이 ‘사실상’ 국가 없는 민족이 된 상황과 관련된다. 사실 국경 너머로 피신하여 태국의 난민촌에서 살아가는 카렌족을 ‘국가 없는(stateless)’ 민족이라고 말할 순 없다. 자체 영토와 거버넌스 체계를 갖춘 ‘준국가체제’였다고는 하나 카렌족의 국가 꼬똘레는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정치체였고, 따라서 난민촌에서 살게 된 이후로도 카렌족은 무국적자가 아닌 ‘미얀마인’으로 분류되어 공식 난민 통계에 집계된다. 그러니 이 책에서 사용된 ‘국가 없는 민족’이나 ‘국가 이후’라는 말은 먼저, 국가 건설의 꿈이 좌절된 이후를 살아간다는 의미라 할 수 있다.

난민 사태 이후 ‘국가 이후’를 살아가는 카렌족의 현실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말을 책에서 찾는다면 ‘난민성’일 것이다. 그런데 난민의 처지가 되었다고 해서 난민성이 즉각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태국은 현재까지도 난민협약과의 정서에 서명하지 않은 채 난민의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기

에 이곳에서 카렌족 난민은 여전히 ‘임시 수용소’로 지칭되는 난민촌에서 살아가면서 ‘난민’이 아니라 ‘전투를 피해 도망쳐 온 피난민’으로 불리며 살아간다. 다만, 태국 정부가 유엔난민기구와 엔지오 등에 의한 지원은 허용하고 있어 불충분하나마 ‘난민등록증’을 발급받아 법적인 보호와 물질적 지원을 받으며 살아가는 처지다.

역설적이게도 난민촌에서 살아온 수십 년 동안 인정받지 못한 카렌족의 난민성은, 이들이 난민촌을 떠나 해외 각지에 살아가게 되면서 인정받게 되고, 이를 토대로 카렌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초국적 연계가 한층 강화되는 과정이 전개된다. 2000년대 중반부터, 주로 태국 국경지대 난민촌에 거주하는 난민을 대상으로 추진된 제3국 재정착 프로그램이 이러한 전환을 가져온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 이 프로그램이 추진되기 전부터도 국경을 따라 점점이 흩어진 난민촌과 난민들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고, 그러한 연결성을 바탕으로 난민들은 태국과 미얀마 양국을 넘나드는 초국적 삶을 실천해 왔다. 저자는 이처럼 난민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더 이상 자체 영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카렌족 난민이 민족의식을 공유하고 공동체로 결속되어 가는 현상을 ‘네트워크 공동체’의 등장이라고 칭하였는데, 제3국 재정착 프로그램을 계기로 이 네트워크 공동체의 사회공간은 양국주의 차원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초국적 사회공간’으로 진화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이 책에서 사용된 ‘국가 이후’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이러한 변화의 결과, 즉 제3국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이 추진된 이후 카렌족 디아스포라의 공동체적 삶이 펼쳐지는 지평이 국가라는 틀을 벗어난 것임을 가리킨다.

카렌족 난민들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아가면서도 초국적 연계를 통해 국가 간 경계를 넘나들며 하나의 민족 공동체로 존속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굳이 ‘국가 이후’라는 표현을 사용할 필요까진 없다고 생각될 수도 있다. 기실 ‘난민’ 문제는 근본적으로 특정 개인이나 사회집단과 국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고, 국경을 넘어 타국에서 비호를 구해야 하는 까닭에 국가 간의 관계로까지 비화하곤 한다. 난민 문제의 세 가지 영구적 해결책, 즉 본국으로의 송환과 일차 비호 국가 사회로의 통합, 제3국으로의 재정착이라는 방법도 모두 국가로 귀착된다. 어디가 되건 난민들이 국가를 피하여 안전하게 삶을 영위하기란 쉽

지 않고, 익명의 개인이 아닌 난민으로 ‘식별된’ 자들일수록 그들의 일상을 매순간 관리하고 통제하려 드는 국가의 통치성과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된다. 저자는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으며, 바로 그 이유로 카렌 난민이 주체적이고 역동적으로 개척해 가는 ‘국가 이후’의 또 다른 통합의 경로에 주목한다. 이는 더 이상 영토에 매이지 않게 된 사람들이 하나로 연결된 민족으로서 추구할 수 있는 정치체가 국가가 아닌 다른 무엇이 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탐색하려는 시도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저자가, 민족을 ‘상상의 정치공동체’로 정의하면서도 일정한 경계를 지닌 영토에 사람들을 ‘민족’으로 고정시키는 민족 국가의 형성과정에 관해 다룬 앤더슨(2018[1983])의 논의가 ‘상상에 경계를 설정하는 모순’을 드러냈다고 지적하며, 그러한 모순의 해법으로 ‘반드시 국가 체계일 필요가 없는’ 체계를 파악하는 것이 민족 이해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는 데서도 이를 엿볼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카렌족의 초국적 네트워크 공동체가 ‘국가 이후’를 살아가는 민족의 대안적 정치체라고까지 말하진 않는다. 그렇지만 저자가 카렌족 공동체의 초국적 삶의 양식을 예로 열어 놓은 ‘국가 이후’에 대한 상상은, 국가에 대항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국가와 사회/공동체의 관계를 재조정하고 ‘반드시 국가 체계일 필요가 없는’ 공동체의 존재 이유와 현존 방식을 재사유하게 하는 지평을 열어 준다.

II. 국가와 난민이 꿈꾸는 서로 다른 ‘통합’

재정착 난민을 어떠한 관점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관한 근래의 논의는 수용국 문화에 절대적 가치를 두는 동화주의나 형식적 수준에서의 다문화주의보다는 ‘통합’이라는 관점을 취할 것을 권장한다. 유엔난민기구 또한 2002년부터 모범적인 통합에 관한 틀을 개발하여 재정착 관련 당사자들에게 제공해 오고 있다. 이에 따르면 통합은 “법적·경제적·사회문화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역동적이고 다면적인 쌍방향 과정의 산물”이어야 함이 강조된다(157). 하지만 재정착 난민을 받아들이는 국가들은 그러한 쌍방향 과정으로서 통합을 도

모하기보다는 자기 사회의 기준과 요구에 부응하는 ‘바람직한’ 시민으로 주조하는 데 목적을 두고 난민 통합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런 이유로 저자는 재정착 난민 수용 제도 아래 이루어지는 통합의 과정이 “난민들을 새로운 주체로 만들려는 포스트식민주의 작업의 일환일 수” 있다고 비판한다(19).

그렇다면 난민들이 자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고 자립하는 것을 목표로 여러 가지 정착 및 통합 지원 프로그램들을 가동하고 있는 국가들의 노력은 어떤 점에서 문제적인가? 책에 소개된 다섯 국가 사례에서 공통적인 것은, 재정착 난민을 선정할 때 유엔난민기구가 우선순위로 고려하길 권장하는 난민의 위급성이 아니라 자국 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우선순위로 고려한다는 점이다. 사실상 재정착 난민 제도는 난민 수용 국가가 자신들의 기대에 부응할 만한 난민을 골라서 선별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장치나 다름없다. 가령 호주는, 항공편으로 난민을 ‘데려오는’ 재정착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한편으로, 급박한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배를 타고 들어오려는 난민들은 접근을 차단하거나 강제수용소로 보내는 두 얼굴의 난민정책을 추진한다. 난민의 위급성을 외면하는 방식이 꼭 그러한 형태는 아니고, 그동안 받아들인 난민의 수를 고려하면 호주가 특별히 비난받을 일도 아니다. 그렇긴 하나 수용 이후 난민에게 부과되는 통합의 과정에 내재하는 논리는 다른 문제다. 호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가 난민의 주체성과 수행성을 인정하는 쌍방향 통합이 아닌 자국의 필요나 가치를 중시하여 일방적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책의 핵심 주제이기도 한, 난민의 빠른 적응과 통합의 조건으로 중시되는 종족 공동체의 역할과 관련한 국가의 태도에서는 일찍부터 많은 난민을 받아들여 난민 통합에 관한 정책과 제도를 구축한 국가와 비교적 최근에야 난민을 받아들인 국가가 차이를 보인다. 각각 2010년, 2015년부터 재정착 난민을 받아들인 일본과 한국이 후자에 속하는데, 두 사례에서는 재정착 초기부터 국가가 강도 높은 초기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새로 들어온 난민에 대한 종족 공동체의 접근을 제한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적응 프로그램은 사실상 일방적으로 자국의 문화적 규범과 가치를 주입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저자는 국가가 난민에 대해 ‘소유권’을 행사하고 엄격히 통제하려는 모습을 보인 이 두 국가의 사례를 ‘관이 민의 품행을 훈육하는’ 동아시아 특유의 관민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렇지만 저자는 다른 한편으로 ‘국가-사회’ 관계의 논의 틀을 참고하여 동아시아의 ‘강한 국가’에 맞서 종족 공동체가 어떻게 국가를 상대로 재정착 난민에 대한 신뢰와 거버넌스 정당성을 확보해 갔는지를 보여줌으로써 ‘국가 이후’를 살아가는 난민에게 종족 공동체가 갖는 중요성을 환기시켜 준다.

호주와 노르웨이, 미국은, 일찍부터 재정착 난민을 대거 받아들여 온 국가들답게 난민의 조속한 적응과 정착,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체계와 프로그램이 잘 갖추어져 있다. 그런데 이들 국가는 난민들을 프로그램의 대상으로 변환하여 재정착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측정하는 일에 더 큰 관심을 보인다. 난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경제적 자립과 사회 통합을 달성하도록 지원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통합은 프로그램이 훌륭하다고 해서 개별 난민 모두가 동일하게 달성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난민들 저마다 재정착 사회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역량이 다르고, 설령 역량을 갖추었다 해도 해당 사회에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지는 거의 전적으로 그 사회의 요구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저자의 옛 친구 플라투와 게일모(호주), 래티(노르웨이)의 성공 사례가 말해 주듯이 통합은 정부 프로그램에 의해 기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결과물이 아니라 개별 난민이 끊임없이 주어진 처지와 환경에 대응하고 협상하는 과정을 통해 달성된다. 더구나 이들은 매우 드문 사례일 뿐, 수용국 사회가 요구하는 통합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다. 이 경우 이들은 사회 안에서 ‘문제시’되곤 하는데, 이는 난민들에게 상당한 돌봄의 ‘은혜’를 베푸는 노르웨이와 같은 복지국가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재정착에 성공하지 못한 난민들은 복지국가 재정에 부담을 안기는 존재로 여겨지곤 한다.

저자는 이처럼 성과 목표에 천착하는 서구권 국가들의 통합 정책이 카렌족 난민이 추구하는 또 다른 경로의 통합 전략과 그것이 카렌 공동체 차원에서 갖는 중요성을 보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가령 호주의 안작데이(ANZAC day) 사례는 국가의 통합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카렌 종족 공동체가 역사를 자원으로 삼아 수용국 사회에서 정당성과 자격을 인정받는 방식으로 그들만의 통합 경로를 개척해 감을 보여준다. 저자는 또한 통합에 관한 기존 논의가 일국적 차원의 영토를 통합의 최종 장으로 취급하여 성공하면 통합이 완료된 것으로, 그렇지 않으

면 여전히 통합의 도정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정주주의(sedentarism)의 오류’를 범한다고 지적한다. 저자 자신이 직접 따라나선 유럽 카렌족 기독교 네트워크 행사를 위한 여정이 말해 주듯이, 카렌족 난민의 통합은 한 국가 내에서 완결되지 않고 모빌리티의 수행을 통해 형성되는 초국적 사회공간에서 더욱 충만하게 이루어진다. 한 국가 내에서 통합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라도 초국적 사회생활의 장에서 관심과 돌봄, 공현존의 즐거움을 얻고 자존감을 회복한다. 이러한 경우 통합은 아직 완료되지 못한 채 여전히 ‘도정’에 있는 게 아니라 해당 국가의 영토를 넘어서 완성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을 저자는 강조한다.

미국의 재정착 난민 사례는 ‘계산된 친절의 원리’에 기초하여 신자유주의적 민관협력체제로 운영되는 미국의 난민 수용정책이 부과하는 경제적 자립 달성의 압박과 인종 관계의 질서를 헤쳐 나가기 위한 방법으로 비주류 간의 초국적 연대가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국인 미얀마와 현재의 거주국인 미국, 여기에 제3국인 한국을 연결하는 이러한 연대를 저자는 ‘삼각초국주의’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설명한다. DNA 검사를 받아서라도 한국인 혈통을 입증하고자 하는 엘루노 가족의 이야기나, 세종아카데미에 다니는 미네소타의 카렌족 사례는, 문화적 차원에서는 인종질서의 위계를 벗어나지 못함을 가정하는 ‘분절적 동화’론과는 달리 ‘소수자-소수자 연대’가 비주류 집단의 출구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책은 주요 난민 수용국의 난민 통합 역사와 정책 및 프로그램이 가진 특징을 잘 정리한 훌륭한 안내서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아주 간략하게만 살펴보았지만, 저자가 어떤 이유에서 난민 재정착 제도를 해당 사회가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새로운 인간으로 주조하려는 포스트식민주의 작업의 일환이라고 보았는지는 책에 담긴 풍부한 사례들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길 권한다. 노르웨이와 같은 복지국가 체제의 이념은 어떤 점에서 난민들을 복지혜택의 남용자 또는 무임승차자로 보는 시선을 만들어냄으로써 통합의 압박을 가하는지, 비자유행정계약 아래 난민 재정착 지원 엔지오(VOLAG)를 대리로 내세운 미국의 신자유주의적 난민레짐과 캔두이즘(candoism)의 결합은 어떠한 형태의 보상과 처벌 기제를 통해 난민에게 자립의 압박을 가하는지 등을 읽어봄으로써 우리는 왜 카렌족 난민의 초국적 실천이 ‘국가 이후’를 살아가는 전략인지를 좀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III. 아직 가지 않은 길

난민촌에서 인연을 맺은 옛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여정에서 출발한 이 책은 카렌족 난민의 초국적 네트워크에서 핵심 결절이자 허브 역할을 하는 딸라 난민촌으로 돌아가 마무리된다. 오랜만에 돌아가 난민촌에서 하룻밤을 묵으면서 저자는 난민촌이 어떤 곳이었는지를 새삼 떠올리게 되는 ‘현타’를 경험했다고 고백한다. 그런데 저자가 다시 돌아간 난민촌에서 느낀 그 불편함은 그곳을 떠난 이후 영위해 온 편안한 삶에 익숙해져서만은 아니다. 세워진 지 35년이 지나도록 상하수도 시설 없이 배설물을 파묻어야 하는, 이제는 더 이상 파묻을 곳조차 없어질 정도로 열악해진 난민촌 상황이 그 불편함의 실체다. 난민으로서의 법적 권리와 보호를 누리지 못한 채 여전히 ‘임시 수용소’로 불리는 난민촌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는 현실이다. 저자가 알던 난민들은 대부분 재정착하여 떠났지만, 난민촌은 새로 들어온 난민들로 다시 또 들어 차 그 “영원한 임시 공간”에서 삶을 이어간다. 책의 주된 내용은 갖은 어려움에도 재정착에 성공한 난민들에 관한 이야기가 중심이 되지만, 저자는 그 ‘현타’ 경험을 통해 극히 일부에게만 주어진 재정착 혜택 뒤로 여전히 존속하는 난민촌과 난민들의 현실을 잊지 않고 환기한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열악한 난민촌에서도 공동체를 중심으로 문화를 창조하고, 세계 각지로 더 멀리 흩어진 후로는 초국적 네트워크를 더욱 확장해가며 “서로에게 사랑의 빛을 지고, 받고, 갚으며 호혜관계 속에서 통합을 구축”(302)해 나가는 ‘위대한’ 난민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배설물을 파묻을 공간조차 더 이상 확보할 수 없는 난민촌에서 어떻게 그와 같은 일이 가능했을까? 난민들에게 “세상의 창”(48)을 제공해 준 매솿(Mae So)이라는 장소 없이는 가능하지 않았을 일이다. 실제로 저자가 카렌족 초국적 네트워크의 결절이자 노드라고 본 태국의 국경 도시 매솿에 가 보면 난민촌이라는 공간이 만들어진 이래 구축된 ‘국제 난민 구호체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실감 날 정도로 많은 이주·난민 지원

기관과 엔지오 단체의 사무실들을 볼 수 있다. 난민촌을 제2의 카렌 민족주의 의식의 배양 장소이자 전략 구상 장소로 삼았던 카렌민족연합(KNU)의 보건복지 부나 교육부 등 여러 부처 건물도 이곳에 들어서 있다. 난민촌이나 카렌족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 채 살아가는 미얀마 이주민이나 난민 관련 활동을 하는 단체와 시설들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아진다.

2021년 미얀마 쿠데타 이후 매솟에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수는 더욱 많아졌다. 미얀마 현지에서의 활동 제약으로 인해 많은 단체가 이곳으로 와서이기도 하지만, 쿠데타 이후 반군부 시위나 무장투쟁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체포될 위험에 처한 수많은 사람들이 피신해서이기도 하다. 그중 많은 이들이 미얀마로 송환될 경우 난민협약에서 정의하는 바의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UNHCR 2023[2019]: 53), 즉 ‘난민’에 해당한다. 비공식적인 경로로 입국한 까닭에 태국 이민 당국이나 경찰에 체포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은신처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들의 생활은, 눈에 보이는 울타리는 없으나 난민촌보다 더 외부로부터 차단된 것이지 않나 싶다.

그와 같이, 미얀마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으로 인해 태국으로 피신한 수많은 난민을 떠올려 보면, 이상국 교수가 20여 년에 걸쳐 연구한 국경지대 난민촌의 카렌족은 상대적으로 운이 좋았다는 생각도 하게 된다. 그 오랜 세월을 걸쳐 자신들의 삶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지켜보며 그 삶이 놓여 있는 불안정한 기반과 조건들을 드러냄으로써 어느 정도는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다고도 볼 수 있으니 말이다. 서구 인류학의 태동에 관한 설명에서 자주 인용되곤 하는 “선교사들이 먼저 오고, 다음으로 인류학자들이 왔다”는 말 그대로 그 역시도 선교사를 따라 난민촌에 들어간 경우이긴 하지만, 한국에서 카렌족이라는 이름과 난민으로서 그들이 살아가는 현실이 잘 알려지게 된 데는 그의 공이 가장 컸으리라고 본다. 연구자로서도 그는 난민촌이라는, 일정한 경계가 있는 공간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난민 연구를 시작하는 현명한 선택을 했다. 그렇지만 거기엔 빠지기 쉬운 유혹도 없지 않다. 외적인 영향이 없다고 상정된 고립된 환경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고유성으로 내세운다는 점은 초창기 인류학 연구들에 쏟아진 주된 비판이었다. 하지만 이상국 교수는,

이 책이 분명히 입증하듯 난민촌을 고립되고 정체된 공간이 아닌, 실제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계와 이동성이 만들어내는 역동성과 개방성을 탁월하게 포착함으로써 한정된 공간을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연구가 자칫 빠질 수도 있었을 함정을 능숙하게 헤쳐나왔다.

그렇다면 그 오랜 난민 연구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난민촌 밖, 매솓과 그 인근 지역에 흩어져 살아가는 수많은 미얀마 난민에 관한 연구로까지 확장하여 계속해 나가면 좋겠다는 욕심이 생긴다. 다만, 카렌족 난민이 대부분이던 난민촌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사람들이 대상이고, 외부 지원 없이 열려 있는 공간에서 다양한 생계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기도 한 만큼 여러 관점을 가진 인류학자, 혹은 난민 문제에 관심을 가진 여러 학자가 공동으로 연구하는,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함께 갈 수 있다면 좋겠다는 바람을, 책을 읽는 동안 불붙은 열의가 식기 전에 먼저 이 지면을 통해 전해본다.

긴 시간을 들여, 그리고 연구를 위해 이동한 거리만 해도 어마어마한, 그 속에서 오랜 세월 이어오고 있는 사람들과의 인연이 더해져 한층 풍성한 이 책에 관해서는 사실 더할 말이 많지 않다. 서장 격인 1장에 저자가 각 장의 내용을 너무도 명확하게 정리해 두었기 때문에 서평자가 본문에서 그 내용을 다시 쓴다는 게 의미가 없었다. 각 장의 내용도 이미 리뷰를 거쳐 검증된 논문들을 다시 또 보완하여 수록한 터라 흠잡을 여지도 거의 없다. 그럼에도 몇 가지, 책에서 명확히 밝히지 않았기에 얼마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내용에 관한 의견은 더해 보기로 한다.

첫째, 이 책에서 '카렌족'으로 지칭하고 있는 이들이 미얀마에 있는 카렌족 전체가 아닌, 사실상 기독교 카렌족에 한정된 범주임을 책의 초반부에 명확히 밝혔더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책에서는 반복적으로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카렌족 난민의 초국적 네트워크가 사실상 카렌 기독교 네트워크와 중첩된 것임을 강조한다. 그렇지만 1990년대 중반의 난민사태가 카렌족 내부의 균열, 즉 KNU의 무장 조직카렌민족해방군(KNLA)에서 이탈해 나간 불교도민주카렌군(DKBA)이 정부군과 손잡고 벌인 공격도 상당한 역할을 했음을 생각해 보면, 카렌 민족주의와 독립 국가 건설을 향한 여정은 난민촌이 중심이 되던 시절만을 놓고 볼 때보다는 훨씬 복잡한 얘기가 된다. 카렌 종족 공동체의 형성과정을

다른 3장의 한국 사례에서는 ‘카렌족’이라는 집단의 혼종성이 이 종족 공동체가 넘어서야 할 과제로 제시되어 있기까지 하다. 그 과정에서 저자는 의도적으로 따옴표를 붙여 “‘순수’ 카렌족”(97)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는데, ‘카렌족 정체성’을 가진 카렌족만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카렌족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는 종교, 즉 기독교다. 저자 역시 이 문제를 고민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겠지만, 기독교 카렌족이 ‘순수’ 카렌족이고, 이들의 정체성이 카렌족 정체성을 대표하는 것처럼 제시된 점은 다소 아쉽다.

두 번째는, 첫 번째 문제의 연장선에서, 저자가 민족주의 논의의 한계로 지적한 앤더슨의 ‘상상의 공동체’가 노정한 한계, 즉 ‘상상에 경계를 설정하는 모순’에 관한 이견이다. 앤더슨이 “민족은 경계를 지닌 상상의 공동체”(10)라고 정의한 점을 지적한 것인데, 저자는 이 경계를 물리적인 실체, 즉 일정 범위로 획정된 영토의 경계로 해석한 듯하다. 그렇지만 저자가 본문에 인용한 앤더슨의 원문(the nation is imagined as limited)은 ‘경계를 지닌 것으로 상상된 공동체’라고 해석하는 편이 원저자가 책 전반에 걸쳐 주장하려던 바에 더 부합해 보인다. 즉 앤더슨은 우리 집단을 다른 집단과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경계가 있다는 상상 자체가 만들어졌음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다. 이때의 경계는 반드시 영토상의 경계라기보다는 언어나 종교, 의상, 공통의 역사적 경험 등, 다른 종족 집단과 자신들을 명확히 구분하게 해줄 수 있는 상징적인 무엇인가로 구성될 수 있다. 그렇듯 영토라는 물리적 경계에 국한하지 않는다면, 흩어진 개인들을 하나의 민족으로 만들어내는 상상은 확산성과 유연성이라는 자체의 속성을 유지하면서 얼마든지 다양한 외적 표지와 내용을 가진 수많은 경계를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다. 상상에 경계를 설정한 것이라기보다는 처음부터 그러한 경계들에 대한 상상이었다고 보면, 저자가 지적한 모순은 없는 게 아닐까.

더 이상 영토에 고정되지 않고 초국적 연계를 통해 네트워크 공동체로 거듭난 카렌족 공동체는 분명 앤더슨에서 더 나아가야 할 현상이 분명하다. 그렇지만 이 책 전반에 걸쳐 등장하는, 카렌족 난민이 끊임없이 다른 종족 집단과 구분하면서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강화해 간 모습은 앤더슨의 주장이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주는 듯하다. 카렌족의 초국적 네트워크 공동체 역시 다른 민족과의 경계에 대한 상상으로 구축된 정치공동체라는 점은, 초국적 네트워크의 세 번

째 층위, 즉 지배 엘리트인 종교/정치 지도자들이 각국의 동족 구성원들을 방문하여 카렌족만의 공동체를 만들도록 권유하는 데서도 확인된다. 카렌족 공동체 형성과정에 관한 한국 사례는 이러한 ‘초국적 자극’이 이전까지 ‘미얀마인’이라는 큰 우산 아래 살아가던 카렌족이 스스로를 구분해 가는 과정을 촉발한 계기로 작용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책의 마지막 장에 소개된 “어디에서든 카렌족을 돌보고 잊지 말라”(305)는 따블라투의 당부에서 ‘카렌족’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경계가 무엇인지를 상상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된다. 카렌족 난민의 초국적 네트워크 공동체는, 저자가 지적한 대로 민족주의에 관한 논의가 일국주의, 나아가 본국과 수용국이라는 양국 간 회로에 한정된 초국주의 논의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다. 하지만 책 전반에 걸쳐 확인할 수 있듯이 카렌족이 초국적 실천을 통해 더욱 견고하게 자신들만의 ‘경계’를 만들어가는 현상은 앤더슨의 논의에서 연장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셋째, ‘상상에 경계를 설정하는 모순’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민족주의에 관한 논의에서 모순을 일으키는 ‘국가’를 제거하고 공동체와 민족의 문제를 사유할 필요가 있다는 저자의 의견에는 필자 역시 동의한다. 그렇지만, ‘카렌족의 초국적 네트워크 공동체는 과연 더 이상 국가까지는 아니더라도 물리적 영토에 다시금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꿈을 꾸지 않게 된 걸까’라는 의문은 남는다. 저자도 언급했다시피 재정착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은 “1%의 선택받은 자”(70)일 뿐이다. 그중 카렌족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전히 많은 카렌족이 선택받지 못한 채 난민촌에 남아 있고, 난민이 아닌 카렌족도 태국이나 미얀마 등에 남아 살아가고 있다. 저자는 “카렌족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물리적 영토는 더 이상 큰 의미가 없게 됐다”(58)며 KNU의 정치적 목표가 더는 독립 카렌국이나 자치권을 주장하는 데 있지 않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2021년 쿠데타 이후 다시금 1988년 때와 마찬가지로 민주화운동에 합류한 KNU의 행보를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듯하다. 일본에서 카렌족 공동체를 이끄는 소바라테잉이 카렌족 자치만이 아니라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위한 초국적 실천을 주도하고 있는 점도 카렌족과 국가의 문제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한다. 이들은 과연 ‘국가 이후’를 꿈꾸는가?

마지막으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아가는 카렌족이 재정착한 국가에서의 통합보다는 또 다른 경로의 통합을 추구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책에 소개된 사례들 ‘밖’의 사례들에 대한 궁금증이 남는다. 저자의 말대로 카렌 난민들의 초국적 사회생활의 장은 재정착 국가가 난민들에게 부과하는 다양한 형태의 압박과 사회적 고통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원천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고난과 역경의 역사, 난민성을 공유하더라도 모든 개인이 종족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더 큰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 수 있다. 난민들은 일차적으로는 재정착 사회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종족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통합을 추구하는 것은 그 목표가 좌절 또는 지연되는 상황에서, 혹은 성공적으로 안착한 이후 부가적으로 바라는 것일 수 있다. 어떤 맥락에서는 종족 공동체 역시 국가와 마찬가지로 폭력적인 것으로 경험될 수도 있다. 심지어 가족조차도 누군가에게는 관계의 고통을 안기지 않는가. 재정착 난민들은 이 책에서 보여준 것처럼 비주류 민족 집단과의 연대 혹은 삼각초국주의의 실천을 통해 여전히 공고한 인종 질서를 헤쳐 나가기도 하지만, 그들을 비주류 집단으로 분류하는 요소가 되기도 하는 종족성을 지우는 방향으로 사회적 이동과 통합을 추구하는 이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국가 이후를 살아가는, 그렇지만 또 다른 국가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면서 이전까지 자신이 속해 있던 공동체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난민들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지 않을까.

재정착 프로그램 이후로도 인간다운 삶을 향한 난민들의 여정은 끝났다 할 수 없고, ‘떠날수록 들어차는 난민촌의 역설’ 또한 풀지 못하는 현실이니, 아직 가지 않은 길이 여전히 많다. 저자의 후속 연구를 통해, 그리고 앞서 전한 바램처럼 다른 난민 연구자들과 함께하는 공동연구를 통해서도 그 새로운 길들을 만날 수 있길 희망한다.

투고일: 2025년 11월 28일 | 게재확정일: 2025년 12월 2일

참고문헌

- 앤더슨, 베네딕트. 서지원 역. 2018. 『상상된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보급에 대한 고찰』. 서울: 길.
- 전제성·김정현·김희숙·이상국·이진영·부경환. 2023. 『아세안 주요국의 난민지원정책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UNHCR. 2023.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및 1967년 의정서에 의한 난민 지위의 인정기준 및 절차 편람과 지침』. 서울: UNHCR.

